

‘의무’에서 ‘자부심’으로…시선 바뀌는 병역 풍경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현장

키오스크 활용 신분증·본인 대조…대리 수검 방지
첫 현역 1급 전현수씨 “좋은 자랑거리·자부심 가득”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병역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때 병역은 피하고 싶은 부담이자 경력의 공백으로 인식되곤 했지만, 최근 검사 현장에서 ‘성실한 이행’과 ‘당당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청년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15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현장. 2026년 병역 의무 대상자(2007년생)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첫 현역 1급 판정자 전현수씨(19)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겼다”고 밝힌 장면은 병역 인식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신분증과 얼굴 인식을 결합한 키오스크 본인 확인 시스템

은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검사 단계마다 반복되는 본인 인증은 번거로움보다 ‘공정함에 대한 확신’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과거 병역 제도에 대한 불신은 청년들의 냉소로 이어지기 쉬웠다. 그러나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검증 절차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병역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제다.

또 하나의 변화는 병역을 대하는 태도다. 무작정 미루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학업과 진로를 고려해 병역을 계획적으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내 입영이 가능한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도입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청년들은 군 입대를 인생의 중단이 아닌 일정한 단계로 편입시키고 있다. 대학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신분증과 얼굴 인식을 결합한 키오스크 본인 확인 시스템 병역을 삶의 경로 안에 배치하는 방식이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5일부터 12월23일까지 전국 11개 검사장에서 실시된다.

다. 이는 병역이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무청이 현역 판정자에게 나라사랑가게 할인권을 전달한 장면 역시 상징적이다. 작은 혜택이지만, 병역 이행을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신호를 담고 있다.

병역을 마친 청년에게 “수고했다”는 말

이 자연스럽게 건네질 수 있을 때, 병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공동체적 경험으로 자리 잡는다.

공정한 검사, 예측 가능한 이행 과정, 그리고 병역 이후의 삶에 대한 배려가 함께 하는 모습은 병역이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완수한 책임’으로 기억될 것이다.

광주·전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포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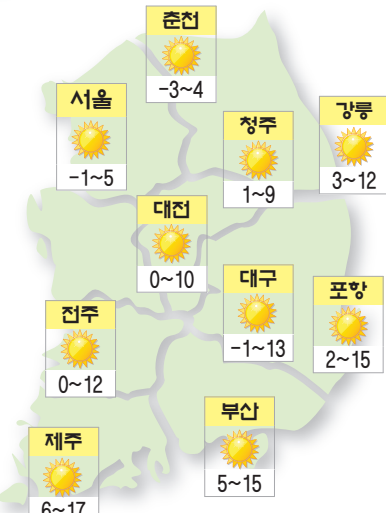
청년들의 표정은 그 담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줬다.

한편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검사는 이날부터 12월23일까지 전국 11개 검사장에서 실시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40 달출 05:47
예침 17:44 달몰 15:07



광주		0~14
목포		1~9
여수		3~12
순천		0~16
구례		0~15
광주		-2~14
임도		1~13
흑산도		4~11
진남		-2~14
진도		0~10

목포	미물(구)	13:03 / --:--
여수	미물(구)	05:33 / 18:47
	미물(구)	08:16 / 19:53
	미물(구)	01:13 / 14:25

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역병

만년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

대 군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7월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원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1720만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3월 14일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

이어 “다만 편취액에 비해 얻은 범행 이득이 크지 않고, 지난해 11월2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건보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

정기석 이사장 “대법 상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은 건강보험공단이 중증 흡연자 3465명에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상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국회 국조특위 수습·수사 현황 보고

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자 72명 조사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사 대표 등 관련자 72명을 조사하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참석해 “참사 직후 전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관계 업무소, 조류 퇴치, 항공기 정비 불량, 공항 시설물 위험성 등 사고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항공 대표를 포함해 관련

자 7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포함해 총 4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와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서는 4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책임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을 향한 모욕, 명예훼손, 계시글 등 총 260건을 수사해 이중 84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유가족협의회와 실무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하고, 제도 개선

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공항 내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설치 경위에 대해서는 “설치변경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 설치 의사 결정에 대한 논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저희도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 실무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2003년 제작사의 현장 조사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

서 새로 19일 형태로 바뀌었고 높이와 두께도 각각 2.3m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 2007년 준공됐고, 2020년에는 기존 구조물 위에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는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는 여객기 충돌량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가 ‘공항·비행장 시설·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정의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유족들 “그날의 ‘4분 7초’ 진실 밝혀야”

국회 앞 기자회견…데이터 공개·향철위 쇄신 등 강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4분 7초’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15일 유가족협의회는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남은 실질적인 시간은 고작 보름 뿐”이라며 “CVR(조종실 음성기록장치)과 FDR(비행자료 기록장치)을

포함해 사고 당시 증발해 버린 ‘4분 7초’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조류 충돌 시점부터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폭발하기까지 기체 결함, 항공사,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등 모든 참사 원인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며 “어느 한 곳에 치우친 편향된 조사는 또 다른 참사를 부를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을 밝히고,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향철위와 경찰은 쇄신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유가족대표는 “산산조각 난 제주항공 2216편 기체처럼, 우리의 삶은 찢기고 비산됐다”면서 “시간은 멈춰버렸고 저희 유가족들에게 그날의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왜 179명의 희생자가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다”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은폐의 장막을 걷어내는 시작이며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은?…경찰 수사 ‘속도’

시 종합건설본부 압수수색…공무원 등 22명 입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공

사 관련 서류와 업무처리 과정이 담긴 자료, 내부 전산망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수사 단계로,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공사 전

반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나 불법 행위(고의, 과실)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앞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일부 핵심 자료가 누락됐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처인 광주시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변경 과정, 시공·감리 절

차,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광주시 고위 공무원(3급) 1명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단순 실무 차원의 과실인지,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형진 구일종합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 광주시 공무원 등 총 22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2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5차례 압수수색을 실시

해 설계와 시공, 감리, 감독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관련 학회에 의뢰한 감정 결과를 종합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최종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박병인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은 “확보된 증거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1시58분 광주서구 차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해 매몰된 작업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